

전북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 개최 ‘불투명’도, 지금이라도 대책 세워야”

내년 개최 일본 간사이 월드마스터스 다음해로 연기 따라 연이어 개최 불가피... 해외선수단 유치 등 기대 못미칠 듯 최영규 도의원, 조직위 해명에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조직위 예산안 설명자료상 허위보고 의혹 내용 빠져있어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23일 열린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공들여 준비하고 있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이하 전북아태대회)의 성공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 의원의 5분 발언은 "2022년 전북아태대회에 이어 2023년 유럽마스터스대회가 개최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올 3월 리우 팬아메리칸대회가 코로나로 인해 연기하기로 결정됐고, 올해 11월에는 같은 이유로 내년 일본월드마스터스가 2022년으로 1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같이 마스터스대회 개최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2022년 예정된 전북아태대회는 참가규모나 인지도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일본월드마스터스와 연이어 개최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국내외 선수단 참가규모 1만3,000명(동반인원 1만5,000명 별도)을 기대하고 있고, 이 중 40%를 해외선수단으로 채워 성공적인 개최를 하겠다는 게 전북도 조직위측의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월드마스터스 대회와의 연이은 개최일정으로 해외선수단 유치나 대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기대 못미칠게 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전북도 조직위측의 대응이다. 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는 직후, 관련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면밀하게 대응 중에 있었다고 밝히고,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전북아태대회 일정상의 순환에 우려를 제기하는 도의회의 목소리가 있었고, 전북아태조직위 예산안 심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이 중요한 사안을 도의회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의도적 은폐로 볼 수밖에 없는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조직위측은 최근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최 의원을 별도로 찾아와 조직위 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협조를 부탁한 바 있다. '공식 발표'가 아니더라도 일정상의 순환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최 의원에겐 얼마든지 전후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최영규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전북아태대회 유치동의안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100억으로 올리고 동의안 통과 이후 현재까지 사업비를 두 배로 늘린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조직위측만 정보를 독점하고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에게 아무 것도 알리지 않은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조직위 측의 해명을 모두 수용한다고 해도 전북아태대회의 성공개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기정사실인 만큼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서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조직위측의 해명자료에는 올해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연기된 리우 팬아메리칸대회가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조직위측이 근거도 없이 내년 9월 개최를 내세우며, 조직위 대표단을 파견보내겠다고 한 예산안 설명자료상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른들의 관심으로 청소년 자살 방지를”

김기영 도의원 “전북도-교육청 등 더 많이 노력해야”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익산 3)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을 통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조금씩 줄어들던 청소년들의 자살이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8년 한해에는 무려 827명의 청소년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으며, 전북도 또한 2016년 이후 33명의 학생이 스스

로 목숨을 끊었고, 2019년에는 무려 12명의 학생이 세상을 등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위험군 조사와 관리 등 학교의 보호가 약해졌으며,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인터넷과 SNS 등 미디어에 하루 6시간 이상 과몰입하는 등 더욱 염려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이며, 학교가 학생들을 자살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김기영 의원은 다음주로 다가온 수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응원에 말을 전하며, “모든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제정을”

국주영은 도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기존 5개 법률 개정도



전북도의회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보조를 맞춰 지속 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이행 계획 추진을 정부와 국회 등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제정과 기존 5개의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법률은 ▲녹색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률 의무화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저장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개신 및 명령의 권한 이양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신규등록 금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내연기관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린뉴딜 관련 5법이 포함됐다.

국주 의원은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C가량 상승했고, 2세기 말까지 3.7°C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어느 때보다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온실가스 대배출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도의회 차원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 전북도에 관련법 제개정과 온실가스 감축전략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한 바 있으며, 도의회는 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건축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등 지역 차원의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등록 금지 시점을 못 박은 '전북도 탈탄소사회 이행 계획'을 전북도가 조속히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겼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곧바로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민주 “공수처법 개정안 25일 심사는 원래대로”

여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과 별도로

여야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 의정각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나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집도 늦추는 질문에 “아니다. 진행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떻게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노력해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2020년 G20 화상 정상회의(2일차)에 참석해 제2세션의 주제인 '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와 관련 의제 발언을 하고 있다.

“저탄소 전략 마련, 탄소중립 국제사회와 보조”

문 대통령 “유엔에 국가결정 기어 수정 제출할 것” “에너지 정책 전환, 그린 경제 비중 높여가야 해” “그린 뉴딜, 녹색 산업 발전... 지속가능 성장 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올해 안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해 2030 국가결정 기어를 갱신,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화상회의 형태로 참여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 목표를 이루려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그린 경제의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면서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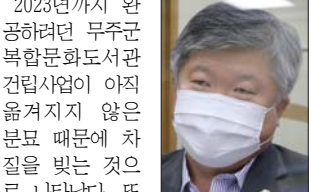
그 중요 축이 그린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그린 뉴딜 정책에 관해 문 대통령은 “사람이 중심이 돼 디지털 혁신과 결합해서 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녹색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효용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고 정의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저탄소 기반의 경제·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인구가 코로나와 기후 위기를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기후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책임 있는 중

견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고교 역할을 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끄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데, 영국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회원국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은 새로운 감염병의 예방을 비롯해 인류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에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함께 행동해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긴밀해졌고, 긴밀한 협력과 공동 행동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뉴스

도내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묘지 이장비 허위수령·부립 경작 드러나 강력 조치해야”

이광환 무주군의회, 2023년 완공 예정 군 복합 문화도서관 건립 지연 관련



2023년까지 완공하려던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이 아직 옮겨지지 않은 분묘 때문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정부지가 군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경작된 정황도 있어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광환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23일 열린 제28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예정부지에 아직 있는 분묘를 빨리 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환 위원장은 “해당부지는 무주군이 2010년에 약 3억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했고 분묘 97기에 대해 묘지이장비를 공

탁해 소유주들을 배려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묘지를 이장하지 않고 있다”며 “복합문화도서관을 착공하기 위해 무주군이 묘지이장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무주읍 당산리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입구에 도서관과 가족, 문화활동의 요람이 되도록 공모단계를 거쳐 많은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민선7기 대표공약이자 무주군민의 숙원이던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이 이미 이장됐어야 할 분묘 때문에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의견이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는 모든 보상절차가 끝났지만 과거 토지주

의 묘지이장 공탁금 허위수령과 불법 경작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광환 위원장은 “공탁금 수령기간 5년이 훨씬 지나 이미 국고에 귀속됐어야 할 돈을 전 토지주가 법원에 각서를 쓰고 돈을 받아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10년이란 세월동안 행정에서 아무 역할 안 했다. 골삭기로 근처를 모두 깎아내서 이장을 왜 안하는지 공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묘지주는 가혹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무주군은 10년 동안 엄청난 편의를 보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무주군 시설사업소장은 “농사짓는 분을 계속 접촉했고 수확 후에는 다시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전체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복합문화도서관 착공 전에 일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군 상수도 전문인력 내부육성 절실”

윤정훈 무주군의회

상수도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군이 내부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정훈 무주군의회원은 23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 상수도 행정이 전문인력 배치가 안 되고 퇴직한 분을 대신할 비상인력에도 여력이 없다. 본연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무주읍 뿐”이라며 적정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상수도 관련 민원현황을 보니



점점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수시간 홍보를 자주 안하는데다 시간도 맞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다. 노후가 쌓인 직원이 적은 것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며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무주군 맑은물사업소장은 “정수관리사 자격시험이 워낙 어렵고 자격증을 가진 분이 무주군에 응시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정수장에서 근무한 분을 교육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했었다”며 정수장 전문인력의 내부육성을 검토했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으로 젊은이가 들어오면 상수도 분야를 공부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노후를 가진 직원이 적정업무에 배치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